2013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요약)

1. 여건 및 전망

□ **(해양관리)** 해양자원·관할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점차 증대**, 국내적으로는 해양이용확대로 인한 **해양환경·해양안전의 중요성 증가**

□ **(해양수산산업) 수산업**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위기와 기회 공존**, 해운시황 침체로 인한 **해운업의 경영악화 심화**

* '13년 전세계 '컨' 물동량은 5% 증가 전망, 항만간 물량유치 경쟁 심화

2. 주요 업무계획 :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

1 국정과제1 : 글로벌 해양경제영토 확대

○ **(영해·EEZ관리)** 해양과학기지 확대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역관리** 추진, **해경함정 증강**(10척, '20년) 등을 통해 해역경비 역량 강화

○ **(경제영토확대) 심해저광구 확보, 원양어업 기지 정비** 등 해외자원 확보 기반 및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14)·**북극항로개척** 등 극지진출 교두보 구축

2 국정과제2 : 전통해양산업의 미래산업화

○ **(수산업) 첨단양식, 유통구조혁신**, 수산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량 확대('12 : 318만톤→'17 : 398만톤) 및 수출액 증대('12 : 23억달러→'17 : 46억달러) 추진

- **어업인주도 지역개발**, 직불제 확대, 재해보험 확대로 **어업인 삶의 질 개선**

○ **(해운·항만) 선박금융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항만클러스터 구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으로 전환

* 항만클러스터 : 물류처리 중심 항만에 배후단지(유통·제조·주거·관광)와 수리조선업, 유류기지 등을 결합하여 전후방산업을 융복합화

3 국정과제 3 :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 **(신시장개척) BT・ICT・ET**를 **해양산업**에 적용하여 바이오산업, 친환경산업 등 **신규시장 선점**, 기존 해양수산산업의 **첨단화** 추진

* 해양바이오산업('12 : 500억 → '18 : 4000억), 선박평형수산업('12 : 3000억→'19 : 40조) 등 **신규시장 점유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해양공간개척) 수중통신, 심해잠수정, 극지자료 정보화** 등으로 수중・극지를 개척, CO_2 **해중저장** 기술개발로 **해중공간이용의 다각화** 추진

4 국정과제 4 :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창출

○ **(해양환경・안전) 해양보호구역** 확대('12:18개→'17:29개) 및 **연안완충구역제 도입(4.4만㎡), 사전예방적** 해상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해양레저) 해양레저인프라** 구축(마리나, 크루즈항 등) 및 **신규수요 창출**(요・보트 체험프로그램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해상교통망** 구축

○ **(시민친화적 항만도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 **부산・인천항** 등에 **국가미항프로젝트** 추진

5 협업 및 평가·환류 계획

○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 **마리나육성**(문광부 등), **해양플랜트육성**(산업부), **통합물류**(국교부) 등

○ **현장 중심의 평가・환류체계 구축**

- **'정책공감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요자평가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 **내부 평가·전문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류체계 구축,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

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

-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

2013. 4.

해 양 수 산 부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1

Ⅱ. 해양수산 정책환경 ····· 5

Ⅲ.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계획 ····· 8

Ⅳ. 추진실적 평가 · 환류계획 ····· 41

Ⅴ.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계획 ····· 43

* 〔참고1〕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Action Plan

* 〔참고2〕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 관련 입법계획

Ⅰ 일반 현황

주요 소관업무

1 체계적인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

○ 무인도서 및 독도의 체계적인 관리
○ 연안·공유수면·배타적 경제수역의 통합 관리
○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화 추진
○ 해양자원·에너지의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해양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

2 안정적인 수산식품 공급, 수산자원 관리 및 어촌 복지·개발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급 관리 및 가공산업 육성
○ 연근해어업관리, 양식산업 육성, 어장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 조성·회복
○ 어촌·어항 개발 및 종사인력 육성·복지
○ FTA 국내대책 수립·이행, 원양산업 활성화, 어업협정 체결·운용

3 해운·물류산업 육성, 항만 건설·운영 및 국제물류 촉진

○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을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운영
○ 해외 물류기업 유치 및 국내 물류기업 글로벌화
○ 에너지 자원, 해양플랜트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비한 미래항만 개발

4 해양환경보전, 해양안전 및 재해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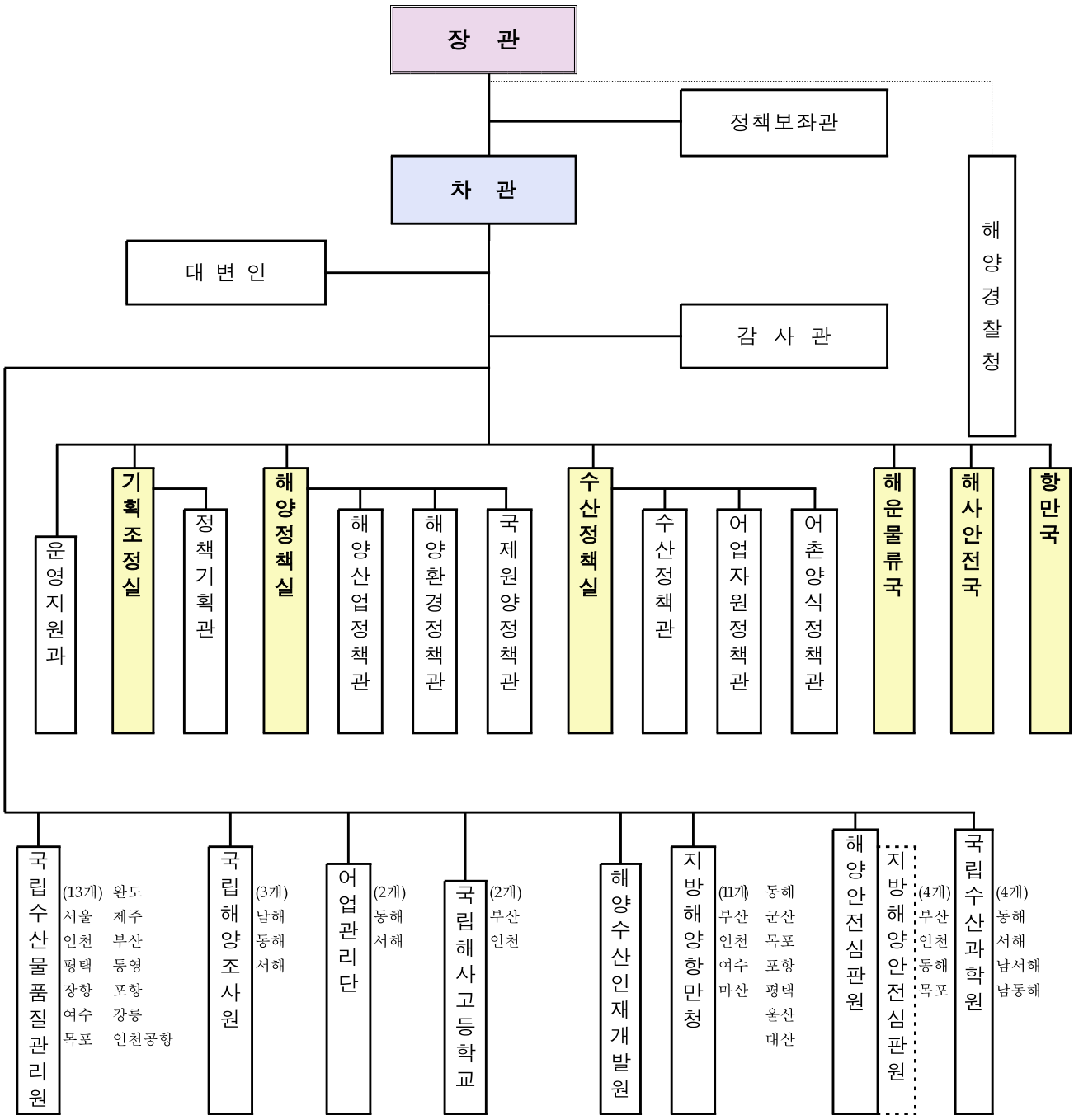
○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해양안전 종합대책 수립·조정 및 해상재난관리의 총괄
○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해양오염 사전예방
○ 기후변화 대응, 건강한 해양생태계 환경 조성
○ 해적피해 예방, 선박안전기준 및 해상교통시설 운용

조 직

◈ **본부 : 1차관 3실 3국 9관**(41과)

◈ **소속기관 : 74개**(1차 20개, 2차 43개, 3차 11개)

◈ **책임운영기관 : 3개**(국립수산과학원, 대산청, 울산청)



법령 및 예산

□ 소관법령 현황 : 총 90개

소관	법 률
해양 및 해양환경(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수산(38)	수산업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어선법, 어촌·어항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금산업진흥법, 염업조합법, 어촌특화발전 지원특별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종자산업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해운항만(18)	해운법, 국제선박등록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한국해운조합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항만공사법, 물류정책기본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12)	선박법, 선박등기법, 선박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항로표지법, 해사안전법,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평형수 관리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5)	수난구호법, 수상레저안전법, 밀항단속법, 해양경비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13년 예산현황 : 총 4조 2,660억원

○ '13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한** 전체규모(총지출 기준)는 **4조 2,660억원**으로 '12년도(4조 1,710억원) 대비 **2.3%**(950억원) **증가**

-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3조 3,613억원**(인건비, 기본경비 등 제외)으로 '12년도(3조 5,973억원) 대비 **1.8%**(640억원) **증가**

- **수산발전기금**은 **6,047억원**으로 '12년도(5,737억원) 대비 **5.4%**(310억원) **증가**

(단위:억원)

구 분	'08예산 (A)	'12예산 (B)	'13예산 (C)	증 감 (C-B)	%	'08 대비 증 감 (C-A)	%
□ 세출예산 계(A)	35,313	35,973	36,613	640	1.8	1,300	3.7
○ 해운항만	20,520	16,358	15,042	△1,316	△8.0	△5,478	△26.7
○ 수산어촌	9,439	11,450	12,473	1,023	8.9	3,034	32.1
○ 해양환경	1,028	1,460	1,874	414	28.4	846	82.3
○ 해양 등 기타	4,326	6,705	7,224	519	7.7	2,898	67.0
□ 수산발전기금(B)	5,493	5,737	6,047	310	5.4	554	10.1
□ 예산·기금 총지출(A+B)	40,806	41,710	42,660	950	2.3	1,854	4.5
※ R&D	1,274	3,630	5,104	1,474	40.6	3,830	300.6
- 해양 R&D	1,274	2,556	3,919	1,363	53.3	2,645	207.6
- 수산 R&D	429	1,074	1,185	111	10.3	756	176.2

산하 공공기관

◈ 총 14개 기관으로 **공기업 5개**(시장형 2, 준시장형 3), **준정부기관 3개**(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6개**

□ 시장형 공기업(2개)

기관명	임무 및 기능
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

□ 준시장형 공기업(3개)

기관명	임무 및 기능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
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지활동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개)

기관명	임무 및 기능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업무와 관련기술 연구·개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시험관리와 해양인력의 교육·훈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조성, 종묘방류 등

□ 기타 공공기관(6개)

기관명	임무 및 기능
(주)부산항보안공사	부산 북항 경비·보안 업무
(주)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 경비·보안 업무
항로표지기술협회	항로표지 제작과 관련기술 연구·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과학기술정책 및 해양과학기술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등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등

Ⅱ 해양수산 정책환경

해양관리	한·중·일간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육상자원의 고갈, BRICs의 성장 등으로 인해 **해양자원**과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인접 국가간 경쟁**이 **심화**

* 중국의 해양굴기(倔起) 기조 강화, 일본의 보수파 '아베 내각' 출범 등으로 한·중·일간 해양 영토·자원 등 갈등 본격화 예상

□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의 **정착**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을 둘러싼 **연안국간 마찰 심화**

* 연안국 모두 EEZ 선포 시, 해양의 36%, 석유 매장량 및 주요 어장의 90%가 연안국에 귀속

○ 특히, **공해상**(극지, 심해저 등)의 **자원개발·선점**을 위한 국제경쟁 가속화

수산·어업	소비시장은 확대, 생산은 둔화

□ **글로벌 수산물 수요는 증가세**이나, **생산 증가 둔화**로 인한 **가격상승**(fishflation) **현실화**

* 세계 수산물 부족량 전망(FAO) : ('10) 940만톤 → ('15) 1,090 → ('30) 9,200

○ **자원 감소, 유가 상승, 고령화**, 어선·양식시설 **노후화** 등으로 **생산 증가율**이 **정체**되어 **국내 수산물 가격도 변동 심화**

□ 자국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장선점** 및 **자원확보 경쟁 심화**

○ **규모화·자본화**를 통한 **글로벌 수산기업 등장**으로 **2·3차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 부각**

*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 일본 마루하니치로 등 거대자본의 양식·수산업 진출

□ FTA 등 시장개방으로 **수산물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어장환경 관리, 위생·원산지 증명 요구 등 **국제규제**도 지속 **강화**

해운·항만	국제 물류시장 선점 경쟁 치열

□ '13년 **세계교역**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4.5%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Drewry, '12.10)

○ 우리나라 **'컨' 물동량**도 **약 5%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일본** 등 **경쟁항만간 물량유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 계획을 수립('10.8)하여 시행중이며, 중국은 주요 항만(칭다오, 닝보 등)에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선박 대형화*와 북극항로 개척 등에 따른 주간선 항로의 선대재편 및 에너지·자원 등과 연계한 북극항로 주변 항만 개발 가속화 예상

* 전 세계에 1만TEU급 이상 선박이 85척 운행중으로 2015년에 231척 운행 예상되며, '13.7월에 18,000TEU급이 항로 투입 예정

□ **물류기업**은 기존의 **해운, 항만운영, 육상운송** 등 업역 경계가 점차 사라지며 **육·해·공 물류**를 **Total Service**하는 **추세**로 변화 중

○ **전문물류기업**은 고유가, 저단가 경쟁 등의 경영여건 속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

* 종합물류기업(38개 인증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17% 고성장 [매출총액 : 15조원('08) → 27.6조원('12)]

□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선박공급 과다 등으로 **해운시황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해운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

* 건화물운임지수 : 6,390('08) → 920('12) // '컨'종합용선지수 : 1,121('08) → 478('12)
* 10대 국적선사 부채비율 : 163%('08) → 235%('10) → 498%('12)

해양환경	해양 이용 수요 증대, 재해위험 증가

□ **소득수준 증대,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문화 레저 공간**으로서의 **연안** 및 **해양**에 대한 **이용 수요 증가**

* 해양관광객 연평균 9% 증가전망(KMI) : ('08) 139 → ('14) 218백만명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침식**이 **지속**되고 있으며 **항만** 및 **인근 연안지역 재해 위험도 증가**

* 21세기 동안 전세계 평균온도는 1.8~4.0℃ 상승, 해수면 18~59cm 상승 예상(IPCC)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함에 따라,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과 **해양 분야**의 **녹색성장 중요성 증대**

해사안전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중요성 대두

□ 해양사고방지를 위해 항로표지·관제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안전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명·재산 피해** 등 **해양사고 지속 발생**

○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해양레저인구의 증가, 해양과 항만의 지속적인 개발 등에 따라 **해상교통 여건**이 **복잡·다양화**

○ 해양사고 원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과실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 및 **민관 협력과 소통**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필요

* 해양사고 추이(사망·실종자수) : '08년 480건(113명) → '09년 723건(107명) → '10년 737건(176명) → '11년 946건(148명) → '12년 726건(111명)

□ 해적 대응역량 강화 등으로 **해적사고**는 **감소추세**이나, **피랍률**은 **증가**,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베냉) 등 **새로운 해적 위험해역 출현**

*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11년 199건 공격에 24척(12%)이 피랍된 반면, '12년에는 70척 공격에 13척(18%)이 피랍되어 피랍률은 증가

Ⅲ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계획

< 7대 중점 추진과제 >

1.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2. 전통해양산업과 BT·IT·ET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3.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4. 지구촌 해운물류시장 개척

5.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 조성

6.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

7. 맞춤형 · 복지형 일자리 창출

1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1) 영해 및 EEZ 관리

1 해양영토 관할권 수호 및 해양경계·해양조사 강화

○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해양영토관리법 제정**('14.상)

* 기본계획(매 5년) 수립, 관리위 구성, 출입제한구역 설정, 정보관리센터 설치 등

○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이어도 해역 관할권 강화를 위해 현 무인운영체계를 **단계적 유인화체계**로 **전환**

* 관계부처 합동 43개 사업 등 7,739억원 규모('11~'15)

○ **UN**에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 「글로벌 해양영토 포럼」을 창립('13.4)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13.6)

○ 동·서해에 해양과학기지 구축, 관할해역에 대한 **정밀지형조사**('08~'17), **해저자원조사**('13~'20) 및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개발**('12~'18) 추진

* 제주 남동부 및 백령도 서부해역 정밀지형조사('13), 흑산분지 해저자원조사('13) 추진

2 해양영토 최후의 보루로서 도서·연안의 관리·이용 확대

○ **무인도서 실태조사 종료**('12)에 따라 조속히 **관리유형 지정 완료**('14년말)

- 지정완료 후 4가지 유형(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에 따라 관리하되, **개발가능 도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

  * 무인도서 개발지침 마련 및 개발가능 도서 이용 확대를 위한 현황도 제작('13.12)

- **유인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섬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양식섬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소득확대 기여** 및 **수산물 생산기지화**

○ 영해 기준점이 포함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기본도 제작** ('12~'15)과 **상징조형물 시범설치**('12~'15, 가거도 등 9개소) 추진

3 주변국과의 EEZ 조업질서 유지 및 조업권 확보

○ 관할해역 경비 강화를 위해 **해경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 미획정 해역까지로 **확대**,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 3대 위반행위(집단대응, 영해침범, 무허가조업)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시행('13)

○ 어업지도선 대형화 대체(1천톤급 1척) 및 고속단속정(4척)을 증강하고 해경·해군과 단속선단을 구성, 집단 저항 중국어선 단속 강화

○ 해양경비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 **대형함정**(10척)* 및 **고속단정**(12척) **증강**, **해경전용부두·전진기지 확충 추진**

  * 현재 3척 건조 중('15년말 까지 건조 예정), '15년 이후 7척 추가 확보

○ 서해 5도 등 **접경수역 어로활동 보호, 우발사태 대응 강화**

○ 日 **EEZ 입어조건 유지**, 서해 **중국 어선 조업질서*** **확립** 및 **한·러 수산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조업쿼터 확보**

  * 중국어선 단속건수 : ('08) 432건 → ('09) 381 → ('10) 370 → ('11) 534 → ('12) 467
  * 우리어선 조업실적('12) : 일본(552척/15,901톤), 중국(145/1,633), 러시아(114/55,565)

(2) 태평양 · 대서양 · 인도양 개척

1 해양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거점 확대

○ **심해저 광물의 개발유망지역 확보**를 위한 **정밀탐사*** 지속 · 확대

* 독점탐사광구 : 태평양(망간단괴 7.5만㎢), 통가 · 피지 · 인도양(해저열수광상 3.7만㎢)

- 해양광물자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심해저광물 산업화기술 개발**('13~'15) 및 **심해저광물탐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13~'14)

○ **수산자원 개발** 역량 강화 및 **수산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제2차 원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13.12)

- 기존 **원양어업 기지**는 수출 · 내수 등 **수산물 생산 · 공급기지로 특화***

* (태평양) 솔로몬 참치, (남미) 페루 오징어, (아프리카) 라스팔마스 민어 등

- **원양 생산량의 62%**(317/511천톤)를 어획하는 **지역수산기구 관할 공해 수역** 조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 및 협상 대응에 총력**

- **'17년까지 50개** 이상 양식 · 가공 · 유통 기업 **해외진출*** 및 거점별로 **해외수산개발센터**를 설립(4개소 이상)하여 **진출기업 밀착 지원**

* 정책융자 확대('13. 11억→'17. 80) 등 지원계획 수립('13.6) / '10년 기준 29개 진출

- 개도국과의 상생 및 자원 개발권 확보를 위해 물자지원 중심의 **수산 ODA**를 어항 등 **대형 인프라, 교육*** 등의 사업으로 **내실화**

* 우수 수산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韓-FAO 공동 세계수산대학 국내 설립(기본계획, '13.8)

- 자원협상 전문가 등 **전문인력 육성**, 해외투자 정보 제공 및 **해외 일자리 창출** 등을 전담하는 **국제수산협력원 설립**(근거 마련, '13.12)

2 태평양 등 대양조사활동 확대

○ **기후변화, 해양자원·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 **양자간**(미국, 중국, 페루, 인도네시아 등)과 다자간(IOC, PICES 등) 공동 해양연구 추진

○ **주요 거점별*** **공동 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국제 협력을 확대, **국제기구**에 **다양한 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페루(중남미), 마이크로네시아(태평양), 중국(동아시아)

○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13~'15) 건조를 통해 대양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엘니뇨 등 **해양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연구 강화

(3) 남극·북극 진출

1 미래 극지개척 기반 확대

○ 기관별로 분산된 **극지정책 총괄기능**을 **종합·강화**하고, **체계적 극지정책 수립**을 위해 **극지활동진흥법*** **제정**('13.12)

* 극지정책위원회 설치 등 총괄기능 강화, 극지기초 및 응용연구 강화 등

○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12.11~'14.3)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보고 기지 항공망 구축 타당성**도 **검토**('13.12)

2 북극항로개척 및 남북극 수산업 진출

○ **북극항로 상용화, 연안국 자원개발 참여** 등 국익창출을 위해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13.12)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

- 한·노르웨이 공동연구센터 개소 추진 등 **국제협력도 확대**

* 북극항로 이용시 수에즈운하 보다 운송거리는 약 32%, 운항일수는 약 10일 단축

○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한 운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극지운항 선박 안전기준**' **개발**('14)

○ **북극해와 연안국 수산업 진출** 및 **남극 수산과학조사 확대** 등을 위한 **수산업 극지 진출계획 수립**('13.12)

□ 100일 세부추진계획

(1) 영해 및 EEZ 관리

○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3.4~12)

○ **해양영토관리법** 제정(안) 국회제출('13.12)

○ **해저지형 정밀조사**('13.3~10), **해저자원 정밀조사 추진**('13.6)

○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해외공동개발자 선정('13.6, '18년 발사예정)

○ **무인도서 현황도 제작** 용역 착수('13.5)

* 무인도서 현황도 제작('13.하) 및 관리유형 지정 완료('14.하)

○ **국가관리연안항**(11개) 기본계획(안) 마련('13.6)

○ **한·러 조업쿼터 배정 합의**(~'13.4)

(2) 태평양·대서양·인도양 개척

○ **해양광물자원** 탐사·개발 **세부이행계획 마련**('13.4)

○ **'13년 해외어장조사 대상수역 선정**(안) 마련('13.4)

○ **해외수산개발센터** 설립 등 해외진출 기업 지원계획 마련('13.6)

○ **국제수산협력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13.6)

(3) 남극·북극 진출

○ **북극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추진('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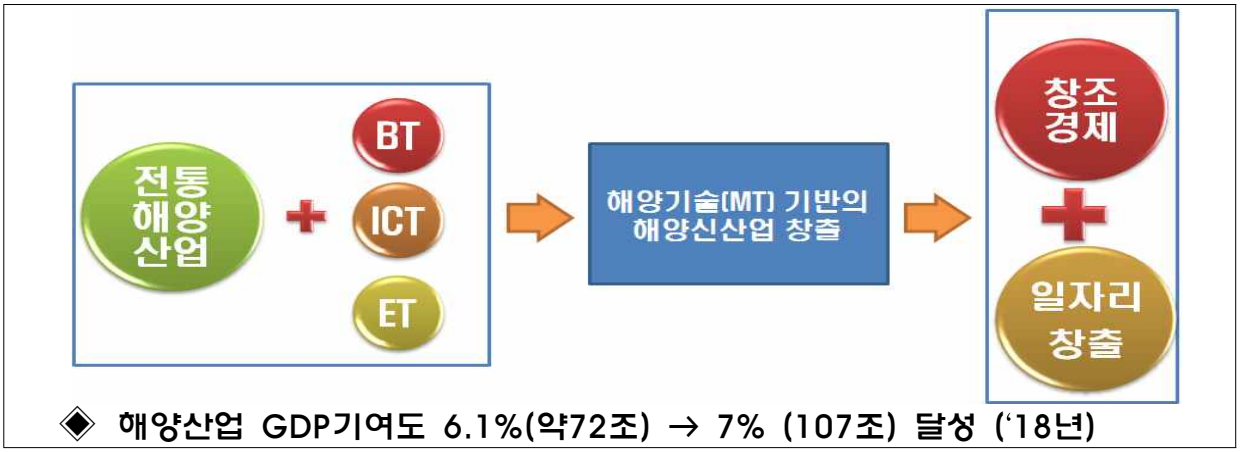
○ **남극 장보고기지 활용계획** 및 자체 활주로 구축계획 수립('13.5)

○ **북극해 시범운항 추진계획 마련**('13.6)

- 극지해역 주변국(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등)의 극지운항안전기준 분석('13.6)

○ **수산업 극지 진출계획 수립**('13.12)

2 전통해양산업과 BT·IT·ET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해양산업 GDP기여도 6.1%(약72조) → 7% (107조) 달성 ('18년)

(1) B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1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약 및 신소재 개발

○ **(신약)** 해양천연물신약의 약물표적 발굴 기술, 신약 선도·후보물질 발굴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해양 신약 소재 개발시장 진출**

* 해양생물 유래 신약개발 사례는 7건에 불과하나, 연매출 약 **42조 7천억원**('10)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시장으로 확대 중

○ **(신소재)** 해양생물의 유전자, 대사물질, 생체기능 등을 활용한 산업용·건강증진용(기능성 식품, 화장품) **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해조자동차·플라스틱, 해양섬유·나노·의료 등 5개 해양신소재 분야기술 개발

2 수산기술과 BT 융합을 통한 수산종자산업 육성 등

○ **(Blue Seed Project)** 유전자 분석, 교배 기술 연구 등 **선진국 수준**의 **수산 종자산업**을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 권역별·품종별 **수산신품종개발보급센터** 설립

○ **(해양정화식물) 해양 정화** 능력이 탁월한 **해양식물**에 **이식기술**(BT)을 접목·활용하여 **자연적인 어장환경·해양환경 개선** 유도

* 염생식물인 잘피장 이식을 통해 환경 용량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개선(~'20)

3 국가 해양생명자원 정보공개로 연계산업 지원

○ **(해양생명자원 관리) 해양생물자원관** 설립('13.하) 및 **해양생명자원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계·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양생물 6천종, 해양미생물 2만주, 분양 가능한 추출물 및 화합물 1만점** 등 정보 공개

○ **(생명정보기술 개발) 유용 해양생물종**의 **유전체 해독·정보 분석** 및 **DB화***를 통해 해양 생명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 생명정보기술(Bioinformatics) :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생물학 데이터를 저장·분석·해석, 생물 시스템의 정보 처리 원리를 기초로 컴퓨터나 인공 지능 시스템 개발

(2) ICT 및 신기술 융합을 통한 첨단 산업 육성

1 첨단 정보통신·로봇기술 개발로 수중·심해 개척 지원

○ **(수중통신)**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중 이동통신 시스템** 구축(9→30km)

* 수중 이동통신 활용 : 해저자원탐사, 바다목장 관리, 다이버간 의사소통 등

○ **(수중로봇)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및 운용기술을 개발하고, **심해 6,000m급 유인잠수정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실시

* 6천m급 심해유인잠수정 보유국가 :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2 해운물류산업 및 수산업 첨단화

○ **(물류·무역·통관 정보공유) 물류·무역·통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신규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물류효율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3D 컨테이너 검색장치**, IP-RFID 기반 **글로벌 화물위치 추적장치** 등을 개발하여 물류효율화

○ **수산생명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新자산어보 프로젝트** 추진

* 주요 서식·산란장 파악, 최첨단 어황 관측 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세계 3대 수산기술국 진입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08) 75% → ('21) 97%

○ 양식기자재·친환경어구 등 **첨단 수산기자재 개발·보급**

* 생분해성 어구 개발, 내재해성 양식시설 등 R&D 지원 확대

○ 에너지 과소비형 어업구조 개선을 위해 **유류절감형·어선원 복지형 어선개발·보급** 및 **노후어선 현대화** 추진('14~'18, 800억원)

○ 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분야에 **ICT 융복합 기술 적용 모델 발굴 사업** 추진

* u-IT 기반 고품질 해조류양식 융합 모델 개발('13)

(3) ET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등 개발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개발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 진출

○ **(친환경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기술의 **실용화**와 **경제성 제고**를 위해 **복합이용*** **기술 개발**('13~'15)

* (공간확대) 천해 → 심해 / (기술확대) 개별에너지 → **복합발전(파력+해상풍력 등)**

- **시험파력발전소**('13.10 준공),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수냉난방기술***, **온도차 발전기술**도 개발('13~'18)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강릉 녹색시범도시 등에 활용

○ **(해양바이오에너지)** 해양 고세균, 미세조류 등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수소*, 바이오디젤** 등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원천기술 확보**

* 연소과정에서 CO_2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수소시장 수요량 5%(1천억원대) 창출('18)
** 바이오디젤 경제성 확보를 위한 미세조류 대량배양장(인천 영흥도) 확대 ('13~'15)

○ **(CO_2 해저저장) 대규모 CO_2 해저 지중저장 기술 개발**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국제시장에 적극 진출**

* 울릉분지에 실증 저장 위치를 선정하고, 수송 및 저장 기술을 개발(~'22)
** CO2 해중저장시장 전망 : 현재 시장 형성 중 → '20년 45억 달러 → '50년 200억 달러

2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항만, 친환경 어장 조성

○ **(친환경 항만)**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등) 발전시설 도입*** 및 항만 CO_2 발생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 확대**

* 항만 내 건물옥상 및 배후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12~'16, 95.6MW),
** 하역중 선박발생 CO_2가 전체 발생의 25%를 차지하며 AMP 도입시 49.1% 감축 가능

○ **(친환경 어구)**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 창출을 위해 **자연 분해 기술**이 접목된 **생분해성 어망**을 보급하여 **어장**의 **생산력 강화**

(4) 선박 및 해양플랜트 산업 고부가가치화

1 국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첨단선박개발 분야 선점

○ **(친환경선박)** 「**친환경선박 시험·인증·표준화(TCS)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추진('11~'16, 220억)

○ **(평형수설비)** IMO 승인 28개 기술 중 **아국이 10개로 최다기술 보유**중이며 지속적 원천기술 확대 및 세계시장(80조) 선점 추진

* '19년까지 세계시장 50%(40조) 선점목표

○ **(친환경 기술기준) LNG 연료 추진선박 기준** 개발('13년 중)로 **미래선박 건조 기술 및 항해장비 기술 선점**

2 해양플랜트 기술력 향상

○ **해양플랜트 사전타당성설계**(pre-feed) **기술** 등 **건조 외 분야**와 **부유식 LNG 벙커링** 등 **신분야 핵심기술**을 개발

○ 업계 애로기술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13~'15) 및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100일 세부추진계획**

○ 차세대 **해양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 마련**('13.4)

○ **신약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13.4)

○ **Blue Seed Project**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13.5)

○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 시스템 **시범운영**('13.5)

○ 차세대 시퀀싱 기술을 활용한 밍크고래 유전체 해독 추진('13.6)

○ **시험파력발전소 건설 추진**('13.4~10)

○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13.4)

○ **해양바이오수소** 생산성 향상 연구 추진('13.6)

○ **CO2 해저 지층저장** 기술개발 착수('13.4)

○ **제주항 육상 전원공급시설** 추가 설치 착수('13.4)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신청('13.6)

○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 기술개발** 착수('13.4)

○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관련 규칙 개정('13.5)

○ **Green Ship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신청('13.6)

○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안) 마련('13.5)

3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1) 양식산업 육성 및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

1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보급 확대

○ 배출수를 최소화하는 **무환수 여과시스템**을 **개발**하여 **빌딩양식** 등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 보급** 확대

* ('13~'14) 타당성 조사 → ('15년 이후) 순환여과시스템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 추진

○ 유·무인도서에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복합형 생산단지(양식섬) 조성**을 통해 **전략 양식품목(전복, 해삼)의 대량생산 및 수출 선도**

-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으로 체계적인 양식산업 육성

* 양식단지 : ('13~'15) 7개소, 400ha / 「(가칭)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마련('13.12)

○ 항생제 사용저감을 위한 **백신개발 실용화 연구 확대** 및 질병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별 **방역센터**(남서해, 해조류) **확충**('13.12)

* 백신개발 확대 : ('12) 3종 / 35억원 → ('13) 4 / 53 → ('17) 5 / 60

2 양식·어업 분야 진입 장벽 완화

○ **(양식면허)** 신규 인력 및 자본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어장환경관리 요건**은 **강화**

- 후계자 등 **젊은 인력**에게 **면허권**을 **우선 발급**하고 마을어장 **이용 효율화**(어촌계원, 조합원→어업회사, 영어법인) **추진**

○ **(어업허가)** 전자어업허가증 교체·발급을 통한 **유휴허가 정리**,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한 **정부 직권감척** 등 **신규 인력 진입기회 마련**

* (~'13년) 허가정수 초과업종 대상 폐업지원형 희망 감척 → ('14년~) 자원관리형 감척 시범 도입

○ **(진입·퇴출 효율화) 어선 가격·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포털**을 **구축**('14년)하여 신규 및 은퇴 희망 어업인간 **어선거래 활성화**

3 안정적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 **연안바다목장, 내수면 생태목장** 등을 **생태관광형 모델**로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관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연안바다목장 : ('13) 4개소(보령, 울릉, 당진, 강원고성) 추가 조성
* 내수면 생태목장 : ('13) 적지조사 → ('17) 4개소 조성, 서식장 및 친수공간 제공

○ 종묘방류 등 자원증강 사업을 확대하고 권역별 **바다숲**을 **조성**하여 **산란·서식장 복원**('13년 3,282ha → '17년 5,500ha)

- 바다 속 생태계 복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한 **제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13.5.10 제주도 서귀포 운진항)

○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내실화·광역화**하고 총 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업 확대

* 자율관리광역공동체 : ('12) 42개소 → ('13) 50개소

(2) 수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지원

1 수협을 유통·판매 중심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바젤Ⅲ 도입 대응

○ **(지역수협)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설립, 지역·품목별로 **물량을 집적**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전처리·가공** 등 **상품화** 지원

* ('12) 2개소 : 강원 속초, 제주 한림 → ('13) 3 → ('14~'17) 10

○ **(수협중앙회)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통해 **지역수협의 생산품**을 **소비지에서 집적**하여 **도매 중심**으로 **대형 소비처**에 **판매**

* ('13) 기본계획·FPC 연계 운용방안 수립 → ('14) 예타 → ('17) 1개소 → ('21) 7개소

○ **(수협은행)** 은행 자본규제 강화[국제회계기준(IFRS), 바젤 Ⅲ]에 대응, **신용사업부문**의 **독립법인화 추진**

2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 **B2B·B2C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및 **수협 계통조직의 생산·가공품 취급 물량 및 판로 확대**

○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의 온라인 쇼핑몰 통합**을 통하여 생산자 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3 지역 중심의 가공산업 육성 및 인증제 개편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지역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확충**하여 **원료가공부터 수출**까지 **원스톱** 지원('13년 2개소 신규)

○ 생산단계 **품질관리 중심의 인증제**를 **이력추적** 및 **위해요소 관리**가 가능한 **우수관리 인증제**로 **개편**

* 심사 : (현행) 생산단계 품질 → (개편) 생산·가공·유통·단계별 품질·안전성·위생 등

- **유기수산물 인증제**('13.6) 및 **에코라벨링 도입** 등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증제도로 개편**

* ('13~'14) 신규 인증제 도입 타당성 등 조사·분석 → ('15~'16) 관련법 제·개정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및 **자갈치 시장**을 **수산관광 명소화** 추진

* 부산시의 공동어시장 인수 및 도매시장 설립·운영계획 수립 후 예타 조사

○ **천일염 품질인증제** (제품·생산방식 인증) 시범사업 실시('13.7), 염전 주변 및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준** 등 **마련**

*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을 포함하는 소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13.8)

(3) FTA 대응력 제고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

1 수산물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과의 FTA 철저 대비

* '12년 <수출> 1위 일본(982백만불), 2위 중국(372) / <수입> 1위 중국(1,083), 2위 러시아(654)

○ **피해업종**은 **피해보전**, **취약업종**은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 **경쟁력 있는 업종**은 과감한 투자로 **수출 확대**를 목표로 대책 수립

* 연근해 어업('13)을 시작으로 업종별 연구용역을 거쳐 대책 수립(~'15)

2 현장 애로사항 발굴·해결을 통한 수산물 수출 확대

○ **수출촉진 T/F**를 구성하여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대한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13) 및 **중소수출 업체 융자**('13, 1,340억원) **확대**

□ 100일 세부추진계획

(1) 양식산업 육성 및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

○ **빌딩양식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3.5)

○ **복합형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13년 세부사업계획 승인('13.3)

○ **해조류바이오매스** 대량생산 연구사업 계약 체결('13.4)

○ 어업허가 **상한톤수 조정방안 마련**('13.5)

○ **대형 지도선**(1척, 1천톤급) 건조('13.3~10)

○ 연안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선정**('13.7)

(2) 수산 유통산업 혁신 및 가공산업 지원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실무 **TF팀 구성·운영**('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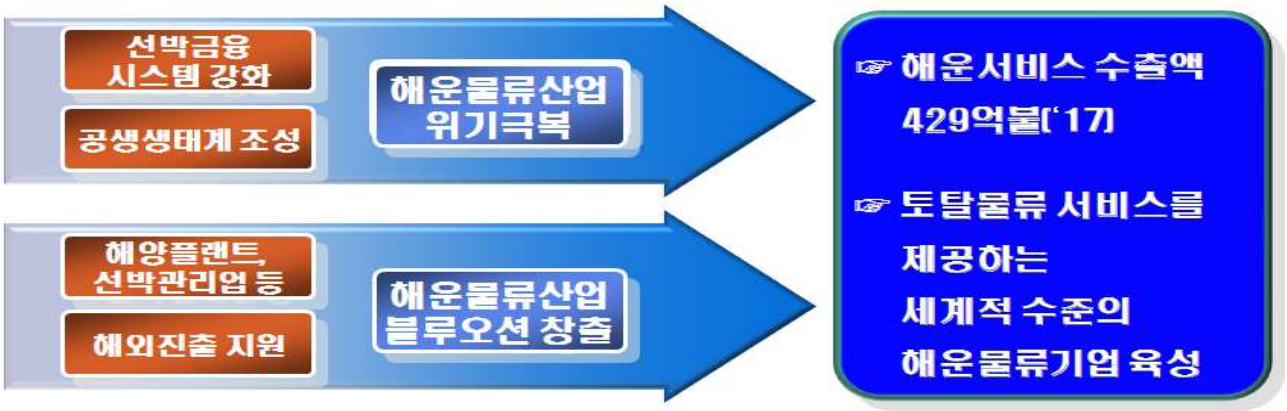
○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 점검('13.5)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13년 사업자(3개소) 공모('13.5)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계획** 수립('13.5)

○ **유기수산물인증제** 도입 추진('13.6)

4 지구촌 해운물류시장 개척



(1) 해운·물류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① 해운·물류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해운 불황 극복을 위한 **선박금융시스템 강화**

- 불황기 **민간금융 경색 방지**를 위한 **공적 보증기능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 및 선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기금 신설 추진**

*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조정 필요 등으로 **선박금융공사**(공약) 설립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운업에 대한 보증강화 필요

-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貸船) **의무기간 단축**('13.10), **펀드 운용사 겸업금지 완화**('14) 등 규제 합리화로 **선박펀드 투자 활성화**

○ 항만시설 사용료를 해운항만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물류산업의 공정경쟁 확보방안 마련**

* 항만하역업 등록기준 강화, 불공정한 거래관행 억제 등을 위한 제도개선

○ 기존 육송화물의 **연안해운 전환 촉진**을 위해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한 **초중량화물 운송**을 **활성화**

* 전환교통보조금(억원) : ('10) 8.9 → ('11) 20 → ('12) 35 → ('13) 30

* '12.10.4일부터 '13년 5월까지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초중량화물(발전설비 등) 총 25항차 운송계획이며, '17년까지 60항차 이상 운항 예정

2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

○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정부간 해운회담 개최, 타당성조사 지원** 등 **해외 신시장 개척**

* 몽골, 미얀마, 조지아 등 **신흥 자원부국**과 협력 확대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 **3개 대륙**(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거점 항만건설** 사업 진출, **항만 운영 시스템·연안정비·어항** 등 연관분야 **협력 추진 및 인력 진출**

* 투자설명회 개최, 민관합동수주 지원단 파견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다각적 지원

○ **TSR, TCR** 연계 등 **한·중·일·러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극동 러시아 항만개발** 참여, **한중일 복합운송** 적용 항로 확대 추진

- **한중일 물류장관회의**(2년마다 3국 순회개최, '14년 제5차회의 일본 개최) 등의 협력채널을 통해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가속화**

* 1차 '06년 韓(서울), 2차 '08년 日(오카야마), 3차 '10년 中(청두), 4차 '12년 韓(부산)

(2) 항만별 특화 개발 추진

1 항만을 국가경제 발전의 전략거점으로 육성

○ 국제 기간항로 상에 위치한 **부산항**과 석유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된 **울산항**을 **국제 '컨테이너' 및 '오일' 허브항**으로 **개발**

- (부산항) 컨부두(2-5), 배후단지(웅동), 배후수송망(제2배후도로)을 지속 확충하고, 초대형선박 출현에 대비 항로 증심(15→17m, ~'16) 추진

- (울산항) 오일허브 1단계 선석 착공('13.12), 오일허브 2단계와 남항 지역 정온 확보를 위한 남방파제 공사 착수('13.하)

○ **배후권역, 잠재력** 등을 감안한 **항만별 특성화 전략 추진**으로 항만과 주변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

- (광양항) 항만 활성화 및 역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수신북항 개발

- (인천항)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신항 '컨'부두 및 배후단지 집중 개발

○ 외국인 투자 유치와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위해 **1종 항만 배후단지**(174만㎡)**를 지속 공급**하여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

* '13년 항만별 배후단지 공급계획(만㎡) : 부산 37, 광양 101, 인천 13, 평택 23
* 글로벌 항만마케팅센터 구축: 기업 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유치활동 지원

○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항만산업, 연구기능**을 **클러스터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 마련

*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13하)

○ 장기(목표년도 2050년) **준설수요를 파악**, 권역별 대규모 **광역투기장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반영**('13.12)

* 조성 매립지는 매립 완료 후 도시·산업·물류·친수공간 등으로 활용

2 부산항 '컨' 환적 허브항만 지위 강화

○ **피더네트워크 확충** 및 **신·북항간 원활한 환적시스템 구축**, 대형 글로벌 선사에 대한 **목표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환적비율 50% 달성**

* 연간 10만TEU 이상 물량유치가 가능한 선사 대상/ 약정물량달성시 인센티브 지급
** 부산항 환적비율(%) : 43.8('07) → 44.2('10) → 47.7('12) → 5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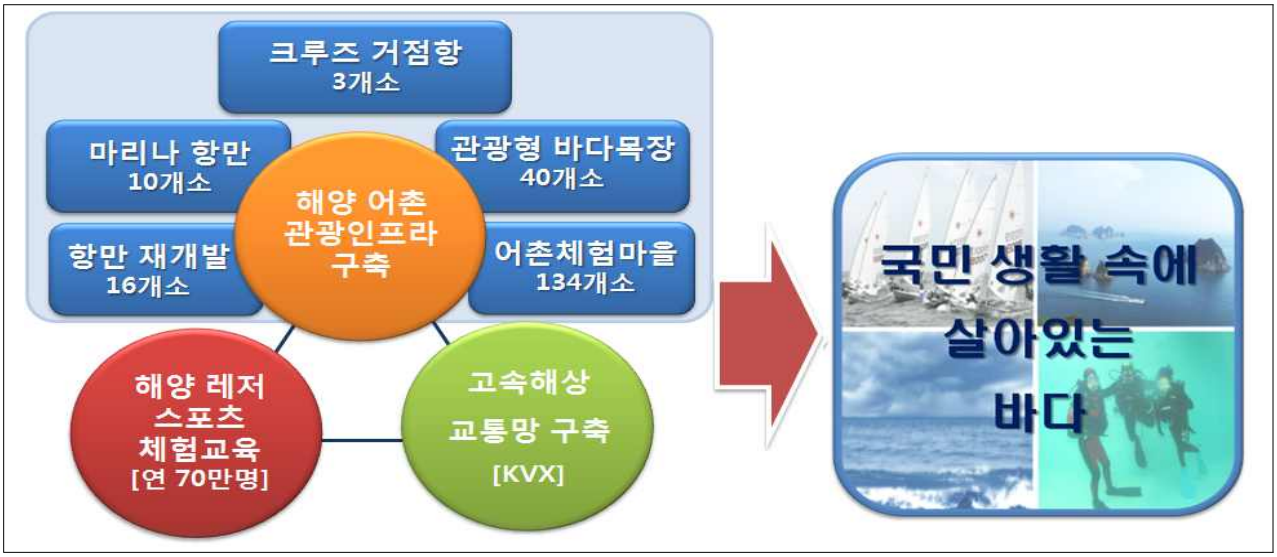
- **일본 서안** 및 **북중국 지역의 화물**을 우리 항만으로 흡수하기 위해 각 지역의 **항만당국과 협력사업 추진**('13.5~)

○ **신항·북항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선 **북항 부두운영사**를 **통합**, **통합운영사에 대한 시설개량** 등 **지원**, **하역요금 안정화 추진**

□ **100일 세부추진계획**

○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 연구 용역 완료('13.4)
○ 선박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13.6)
○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13.5~12)
○ **정부간 해운회담** 개최 계획 마련('13.4)
○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을 위한 **W/G구성**('13.5),
○ **광역투기장** 조성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13.6)
○ **부산항 웅동배후단지** 우선 조성완료(81만㎡, '13.4)
○ 부산항 **환적시스템구축 방안 마련**('13.하)

5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 조성



(1) 해양관광 · 레저스포츠 육성

1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마리나) **거점형 국제 마리나***를 **조성**하고, 10~30척 규모의 **소규모 마리나**** 개발 완료('13.하)

* 동·서·남해안별 2개소씩 총 6개소 조성 추진('13년 기본설계)
** 속초(30척), 후포(30척), 통영(30척), 완도(10척)

- 한·중·일 3국간 마리나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등을 위한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 3년간('13~'15) 한중일 3국 공동 연구 추진('13년에는 동북아 마리나 수요조사)

- **마리나 운영·시설·안전 등에 관한 기준**(표준 매뉴얼) 및 **마리나 관련 산업단지 개발** 방안 마련

- 요트 차터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과 인증제도** 등을 마련

○ (크루즈) **전용부두 확보, 통관·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여객 터미널 확충**을 통해 **부산·인천·제주항**을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육성**

* 부산항·인천항 크루즈 전용부두 축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주 해군기지 개발과 연계하여 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터미널 착공('13.하)

- **국적크루즈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크루즈선의 효율적 운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크루즈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 크루즈 운항실태 및 제도개선 수요조사('13.1～'13.7), 특별법안 검토 연구('13.8～'14.3) 및 특별법 제정안 국회 제출('14년)

○ **(해양레포츠 체험교육)** 요트·보트 등 **해양레포츠 체험인구**를 매년 **50만명**씩 **양성**(바다·강 등 37개소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여 **저변**을 **확산**

- 요·보트, 크루즈, 카약 등 **해양레포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층 확대를 위한 **패키지 콘텐츠 개발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13.6)

* 마리나 정보, 요트대회·클럽, 크루징 루트와 주변 관광정보 등 안내

○ **연안유휴지**(자연형성지, 국·공유지 등)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친수공간·오토캠핑장 등 **실속형의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 사업효과가 큰 7개소(시흥갯골 등)를 선도사업지구로 추진('13)하고, 사업지구 준공('16～'17)이후 추가 추진

2 4계절 중단 없는 해양수산 관광인프라 확충

○ 4계절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

* 팔미도, 간절곶 등 23개 유인등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개최

○ 바닷속 경관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해중공원 조성**(해중 전망탑, 수중탐방로 등)을 통한 **해양관광 영역 확대**(수상 → 수중)

* 강릉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조성 시범사업 추진('13~'15)

○ **어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해중레저 거점마을"**을 **선정**하고 스킨스쿠버, 낚시 등 **유어시설**을 **조성**하여 **레저 수산업**으로 **육성**

3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수산 교육 인프라 구축

○ 해양생물 자원 확보·전시 등을 위한 **해양생물자원관**('14.3)과 교육·전시·체험 등이 복합된 **해양과학교육관 건립**(울진, ~'18)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해양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추진(태안, ~'15)

(2) 연안 · 어촌의 국민 생활 공간화

1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친화적 해양공간 조성

○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국가미항 개발사업** 등을 통해 **품격있는 항만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선도사업**(국제여객부두 등 기반시설은 '15년 완공)으로 **전국 12개 항만 16개소**에 대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 (부산북항재개발) 국제여객부두·터미널 축조 지속 추진, 친수공원 국제공모('13.하)
  * (기타항만 재개발) 인천 영종도투기장 제3자 공모('13.하), 거제 고현항 사업제안 타당성 검토('13.하)

- 해안경관 개선 및 시민친화적인 해양·항만공간 조성을 위해서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항에 **'국가미항프로젝트' 추진**

* 부산항 미항사업은 기본구상안('12년 마련)을 바탕으로 타당성검토 착수('13.하), 인천항 미항사업 기본구상('13～'14)

○ 해상교통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도서방문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

- **해상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속해상교통망 구축방안**을 **마련**('13.말)

* 접안시설 개선('12, 10억원→'13, 30억원),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신규추진('13, 4.5억원)

2 살기 좋은 어촌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어항 개발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 포털사이트, 도시-어촌 교류촉진, 어촌 관광홍보 **지속 추진** 및 어촌 주민 주도의 **어촌체험 마을*** **조성 확대**

* '16년까지 134개 체험마을 조성('12년 현재 97개 조성)

○ **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어촌관광과 어촌이 보유한 수산자원을 융합·특화한 **어촌산업화 추진**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13.5.24) 및 하위 법령 정비('13)

** '17년까지 어촌산업화마을 35개소 조성 목표

○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다기능 어항 개발** 및 시설 현대화, 배후지 연계개발, 민자유치 등을 통한 **어항기능 고도화** 지속 추진

* 다기능어항 : ('13) 1개소 - 13개 대상 어항 중 '12년까지 11개 완공
어항기능 고도화 : ('11) 4개소 선정 → ('12) 기본설계 → ('13) 실시설계

○ 수산과 관광·문화·기능 융복합화, 어촌·어장 배후지역과 연계강화 등을 통한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 창출**

* 어항을 양륙항 등 단순 수산기능에서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및 소득・복지의 거점으로 개발을 위한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13)

□ 100일 세부추진계획

(1)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육성

○ **거점형 국제마리나**(6개소) 기본조사설계 발주('13.6)

○ 국제 **마리나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발주('13.6)

○ 국적 **크루즈** 취항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 발표('13.5)

○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 계획 수립('13.4), 체험교실운영('13.4~10)

○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마련('13.4)

(2) 연안 · 어촌의 국민 생활 공간화

○ **영종도투기장** 재개발 타당성 검토('13.6)

○ **고현항 재개발 사업타당성** 검토 착수('13.6)

○ **국가미항 부산항** 미항사업 타당성검토 **시행계획 수립**('13.5)

○ **국가미항 인천항** 수변공간 활용방안 **연구 착수**('13.5)

○ **국가고속해상교통망** 구축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13.4~12)

○ **연안여객선** 접안·터미널 시설 등 실태조사('13.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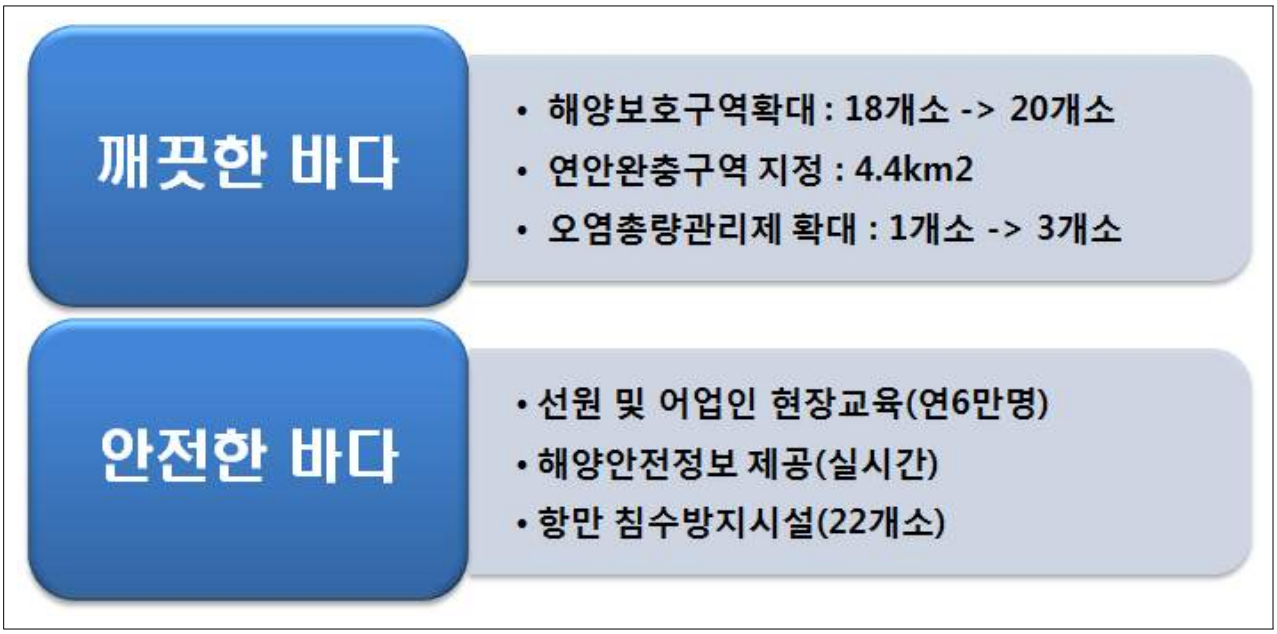
○ **어촌체험마을조성**(7개소) 추진('13.1~12)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13.5)

○ **어촌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13.6)

○ 어항 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어항 개발·정비 사업 추진**('13.4)

6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



(1) 해양환경 관리 선진화

1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 해양환경 조사·진단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주요 오염원의 **해양 배출**을 **집중 관리**하여 **사전예방적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

* (**인프라 확대**) 남해('12 완료)·서해('13.12)·동해('14) 전용조사선 구축, 해양방사능 분석·감시시스템 구축('13.12)

* (**오염원 사전배출관리**)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13.7 시화호 시행계획 수립, '13.5 부산연안 기본방침 확정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화 단계적 추진('11~'15)

○ 오염이 심각한 해역에 대한 **퇴적물 정화·복원**을 추진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통해 생태계 보호 강화

* (퇴적물 정화 복원) 울산 방어진항 복원 완료('13.12), 부산 남항('13~'14년)

* (해양보호구역) 완도군 청산도, 부산시 남형제섬·나무섬 등 3개소 추가 지정('13.11)

○ **어장환경 평가제도 도입** 및 **어장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오염어장에 대한 **어장정화, 어장휴식** 등 체계적인 **어장환경 개선 추진**

* 어장관리해역 제도개선 및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어장관리법' 개정('13)

○ 수산물 생산해역 인근 **육·해상 오염원** 및 **위생 관리**와 **연계**하여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 갱신** 추진('13.6)

* 수질·저질 등 어장환경 및 수산동식물의 위생관리 기준 설정('14)

2 연안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선진 해양공간 관리

○ 침식이 심각한 연안의 **육·해역**을 하나의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연안관리법 개정, '13.12)하고,

* 침식 심각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핵심, 완충)'으로 지정하고, 공작물의 신축 제한, 우선정비 추진, 토지매입 등 실시

- **해안선**에 **인접**한 **도로·주택** 등의 지속적인 **침식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해안선 복원, 침식지역 재정비**(set back) 추진

○ 심화되는 연안침식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확대**('13년, 516억원) 및 사전예방적 연안 침식모니터링 강화**

* '13년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예산 '12년 대비 78% 증가(고창 구시포 등 총 16개 사업)

** '12년도 172개소(10억원) → '13년도 225개소(15억원)

○ 연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진입로·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면서 **관리의 사각**에 있는 **내륙 공유수면**의 **불법이용행위 근절**과 **양성화를 유도**하고,

* 내륙 공유수면 허가·관리 실태 파악('13.5), 제도개선 T/F 구성·운영('13.8)

- 전국 해안의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 바닷가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및 관리실시**('13.12)

* 바닷가 자연형성지(4.4㎢)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안림·해안사구 등을 보전함으로써 자연적 방재효과를 도모('13.12)

(2)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 실현

1 범정부 해사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6대분야*** **중점추진**을 위한 「**2013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고시**('13.2)

* ① 선원의 역량제고, ② 선박안전성 강화, ③ 선사·정부의 관리능력 강화, ④ 안전한 선박통항 환경조성, ⑤ 안전문화 증진, ⑥ 비상대응체계 구축

○ **통합 해양안전 체계 출범**에 따라 어선·상선을 망라하여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13.4~)

- 민·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해사안전종합관리 TF*** **구성**('13.4) 및 **현장 특별점검** 실시('13.6)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검사대행기관, 해양수산연수원, 수협 등

- '어선-상선' 충돌 등 **어선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13.3~4)을 **설정·운영**하여 **안전계도 실시, 해양사고 예방 어업인 전진대회 개최**

* 최근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조업 유도

2 인적과실 저감과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인간중심'의 정책 추진

○ 해양사고 원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관한 **통계 DB 구축**을 추진('13.4~)하고 **현장 교육 강화**

* 선원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현장 및 방선교육 실시('13년 교육인원 16,000명)

- '(가칭) **해사안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전 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공동으로 **캠페인,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추진**('13.4~)

○ **위험해역 통항선박 상시 모니터링**(연중), **보안요원 탑승**(연중), **선원 대피처 설치 의무화**('13.8) 등을 통해 해적피해 예방 철저

* '11.5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선원·선박의 해적피해 없음

3 해양안전종합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 구축

○ 각 선사가 자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기상정보, 선박등록, 검사내역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안전정보 제공

* '13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추진('13.4～11)

4 첨단 해양교통시설 확충 및 장비 국산화

○ **GPS 신호교란 대응**을 위한 **첨단 대체 항법시스템**(eLoran) **구축**

* 사업비/추진기간 : 460억원/시스템구축('13.6～'15.12), 시험서비스('17), 정상운영('18)

○ 항만확장에 따른 **관제센터**(제주·울산) **신축** 및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관제장비의 국산화·신기술 개발 추진**(수입대체 연간 100억원)

* (연구비 / 기간 / 수행자) 총 110억 / '10. 5～'16. 4(6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 2

5 국적선의 안전우수등급 지위 유지 및 주변국과 양자협력 강화

○ 안전관리 취약 외항선박 중점관리를 통해 **아·태 및 유럽에서 우수등급 지위 유지**

* 우수등급 국가 선박은 외국항에서 안전점검 횟수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 중국, 호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적선에 대한 과도한 점검 및 규제 예방**

* 한·中('13.6), 한·濠('13.7), 한·日('13.9) 해사안전정책협의회 참가

6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안전관리 강화 체제 확립

○ 어선 및 인명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VHF - DSC)

- 수협 어업정보통신국(17개소)에 **실시간 어선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

* ('12)동해안 8억원 → ('13)남해안 15억원 → ('14)서해안 15억원

○ 어선원 의식개혁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3억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총톤수 25톤이상), 수협중앙회(25톤미만)에서 소화기 사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등 중요 교육을 **체험형 교육**으로 **실시**

* 교육대상('13) : 39,062명(25톤이상 3,525명/ 25톤미만 35,537명

○ 어선원 안전을 위한 팽창식 **구명조끼 10만개 보급**('17년까지, '13년까지 14천개 보급) 및 상시착용 캠페인 실시(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

○ 원양어선의 VMS(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행정제재 강화 등 **원양 IUU어업 근절**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13)

7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조성

○ 폭풍·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대책 및 외곽시설 보수·보강대책**(아라미르 프로젝트 추진) 추진

- (**침수방지시설**) 해일 내습시 침수가 예상되는 **22개 항만**에 대하여 재해이력에 따라 단계별로 설치 추진(추정사업비 1조 1,886억원)

* '13년에 마산항(방재언덕 설치공사 착공), 삼척항(설계), 목포항(타당성조사)에 침수방지시설 우선 설치 추진

- (**방파제 보강**) 보강대상 **71개소**(추정사업비 1조 3,520억원) 중 **'13년**에 **2개소 보강설계** 추진(74억원) 및 **29개소 보강공사 추진**(475억원)

○ **내진설계 도입**('00년) **이전 설치된 항만시설물** 중 내진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보강**('17년 완료)

* '14년 상반기까지 총 472개 항만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22개소 내진보강 설계 및 12개소 내진보강공사 추진

8 어촌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어항시설 확충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방파제 등 **노후·취약 어항시설 보강**('13~)

- 어항시설 설계파 재검토 및 안전성평가('10~'13) 결과에 따라 가거도항(전남 신안) 등 4개항 우선 보수·보강 추진('13 : 165억원)

* 국가어항 109개항 중 **59개항 보수·보강** 필요(추정 사업비 9,815억원)

○ 기상악화시 어선안전 수용을 위해 **개발중인 어항(10개항) 조기완공**

- 어선 안전수용률 제고('12 : 77.1% → '17 : 82.0)를 위해 **국가어항 개발수요 및 신규지정** 검토('13)

* '17년까지 국가어항에 1조 4,142억원 투자하여 4개항 완공 및 55개항 정비

** 신규개발 수요는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13.12)에 반영

□ **100일 세부추진계획**

○ 연안오염총량관리 통합 **기본방침 마련**('13.4)

○ '13년도 퇴적물 정화·복원사업 착수('13.4, 부산남항/울산방어진항)

○ 갯벌복원사업 착수('13.4~)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마련**('13.3)

○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 갱신** 추진('13.6)

○ 국가연안정비사업 추진 및 **연안 침식모니터링 실시**('13.5~)

○ **연안완충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13.5)

○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13.4~), **안전 TF 구성**('13.4)

○ 인적과실에 관한 **통계 DB 구축** 추진('13.4~)

○ 안전 수준을 높인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포상('13.5)

○ 내진성능 평가착수('13.6), 마산항 접안시설 4개소 내진보강 실시설계 준공('13.6)

○ **취약 어항시설 보수·보강방안** 마련('13.4)

7 맞춤형 · 복지형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약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1) 양질의 일자리 확충

□1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 **요·보트 제조**를 비롯한 **판매, 수리, 임대** 등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20년까지 약 **3만명 일자리** 창출, 약 **9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2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육성으로 고용 시장 확대

○ **(양식산업) 10대 어종**에 대한 양식산업 **집중 육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20년까지 약 **2.2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전략품목별 국내 신규 일자리 창출 >

○ **(관상어·낚시) 관상어산업 육성 법령 제정**, 연관 산업(수족관, 사료·약품 등) 활성화, 신규 낚시공간 조성을 통한 **낚시 관련 인력**(가이드, 인스트럭터 등) 육성

* 수입의존 국내 관상어 시장의 수입 대체 및 수출진흥을 위해, "Aqua-Pet 진흥센터" 설립 추진

○ **(수산기술인력) 수산업경영체** 설립을 지원하고, 이에 국가공인 **수산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권고하여 **수산기술인력의 취업 지원**

* '20년까지 경영체 2천개 설립으로 기술인력 1천명, 산업인력 1.7만명 취업지원

3 해운·항만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 **(해운일자리확대) 국적선대 확충**('17년까지 지배선대 82백만DWT) 및 **선박관리업 활성화**('20년까지 관리선박 4,850척)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 '20년까지 해운산업 일자리 2.1만개 이상 창출

○ **(항만배후단지개발)**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전시·주거·관광시설** 등이 입지하는 **2종 배후단지**를 **시범지정***하고 활성화 추진

* 지정 검토대상 : (무역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부산항, (연안항) 비인항

(2)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1 선원·어업인 육성

○ **부산·인천해사고**의 **선원 및 선박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마이스터高 운영·실습관 증축 등)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실시**

○ **수산고등학교**와 수협·업단체가 연계한 시범승선 추진, 취업지원을 위한 **수산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10개교) 및 **전문화 교육** 지원(20억원)

2 전문 해양수산 인력 양성

○ **(해양과학인력)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를 통한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교육·양성, 확대('14), **씨그랜트 사업**을 통한 해양인력 양성 확대

○ **(수산) 수산대 수산인력양성 프로그램***, **국제수산협력원 설립**('14)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최고수산경영자(4개교, 160명), 전문가(5개교, 150명), 수산벤처대학(1개교, 90명)
* 어촌정착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추가 필요

○ **(해운항만인력) 해양대 정원 확대** 추진, 항만연수원 **장비현대화·교육프로그램 개선**('13년), 대학-기업간 산학연계 지원('13년)

3 청장년층 재취업 및 장년·노년층 귀어 지원

○ **(재취업)** 신규 **수산업경영인** 800명 **선정·육성**('13년 400억),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 확대로 단기연수 후 **해기사 취업 지원**

○ **(귀어)** 귀어 희망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12년까지 173명, 210억원)

(3)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복지대책

1 어촌 및 어민복지 증진

○ **어촌지역 의료 서비스망 구축,** 소형어선 어업인·해난사고 유자녀 복지 확대, 어업인에 대한 **재해 복구·지원 현실화 및** 보험제도 개선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고령양식어가 어장연금제 및 면허어장 휴식 직불제 등 **신규 직불제도 도입**

* ('12) 육지생활권 50km이상 원격 도서 4,417가구(18억) → ('14) 8km/27,000(110)

2 낙후·도서민, 선원·항만종사자 생활복지 향상

○ **(낙후·도서민) 연안항·연안터미널 시설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연안항 개발 지원을 위한 **연안항 경관기본계획 수립**

○ **(선원·항만종사자) 선원복지기본계획**을 수립('13.6)하고, **선원퇴직자 공제제도**를 도입, 항만 친수·문화공간 조성하여 휴식공간 제공

Ⅳ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환류 체계

□ 평가 목적

○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책 집행 결과가 목표했던 **정책효과를 내고 있는 지 평가**

- **(집행확인)**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들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 **(문제해결)** 환경변화나 문제발생 시 이를 **적기에 발견**하고 **적응적으로 집행**
- **(정책환류) 전문가, 정책수요자**로부터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환류**(feedback)

□ 평가 개요

○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집행 현황을 다각도로 평가**

- **내부평가, 전문가평가, 수요자평가**로 나누어 정책추진 단계마다 **적절성, 효과성** 등에 대해 **내·외부 평가**를 시행

<세부평가방안>

내부 평가	◇ 과제 담당자들이 진행현황을 **자체평가** 한 뒤 장차관에게 보고 ◇ **일정에 따른 정책집행**이 원활히 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평가 ◇ 평가주기 : **분기별 평가(연 4회)**
전문가 평가	◇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실천과제 및 공약사항의 진행현황에 대한 분야별 평가 진행 ◇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 구성하여, **추진방향과 실적을 점검** ◇ 평가주기 : **반기별 평가(연 2회)**
수요자 평가	◇ 각 분야별 **정책수요자들**(어업인, 연안주민, 해양산업 종사자 등)에게 주요 정책의 집행 정도를 평가토록 하고 **정책의 효과성도 평가** ◇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 ◇ 평가주기 : **반기별 평가(연 2회)**

○ 평가의 **시기별로 주된 평가와 점검사항을 구분**하여 추진

- **상반기**에는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하반기**에는 **시행과정 및 정책효과성 위주 평가**

- **중장기 과제**의 경우, '13년 이후에는 **정책방향의 재점검**을 포함하여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

□ 평가 실효성 확보방안

○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를 **성과관리(BSC)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성과관리 체계**와 **부합**될 수 있도록 조치

- 과제담당자의 성과관리(BSC) 지표 및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에 반영

○ '13년 **성과관리 계획을 보완**하여 국정과제, 정책과제 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성과관리 계획상에 포함 추진

- 성과관리 지표선정 시 가급적 **부서를 대표하는 핵심지표**로 선정하여 **가중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

○ 평가결과, **부진** 및 **지연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대책**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향후 일정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평가매뉴얼 마련) : '13.4

○ 201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 '13.5

○ 내부평가/전문가평가/수요자평가 실시 : '13.5~12

○ 연말평가를 통해 성공·실패사례 평가, 차년도 계획에 반영 : '13.12~계속

Ⅴ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계획

비 전 국민행복 실현

정책목표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협력·시너지

≪ 융합 행정 ≫

≪ 개별 행정 ≫

협업과제1 물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 현황

○ 물류 업무는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관계기관	기관별 업무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육성 및 지원 등
국토교통부	물류총괄, 육상·철도·항공물류 등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육상물류와 해상물류의 **물류기능**이 **이원화**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

○ **물류기업 사업영역**이 기존의 육운, 해운, 항만운영 등 **경계가 점차 사라지며 육·해·공 물류를 Total Service**하는 추세로 변화 중

⇒ **육해공 통합물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부처간 협업** 시스템 필요

□ 개선방안

○ 부처간 「**물류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물류정책 담당자들간 정책공유 등이 가능한 협조체계 구축

* 월 또는 분기별 개최, 부처별 정책추진 현황, 현안, 협조 필요사항 등 논의

○ 부처간 이견 조정을 원활히 하고 물류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현행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국교부 장관)를 **총리 주재로 격상 검토**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협업과제(안)

○ **막힘없고 효율적인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으로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

○ 물류기업의 글로벌화와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 TSR·TCR 활용 등 **동북아(한·중·일·러)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

○ **항만과 배후 산단의 유기적 연계** 및 도로·철도 등 물류인프라 적기 건설

협업과제2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처

□ 현황

○ 중국어선 불법어업 관련 단속·처벌·외교적 대응 등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 · 법무부 · 외교부** 3개 부처에서 수행

분 야	관계기관	기관별 업무	비고
단 속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 조업지도 및 불법행위 단속	어업관리단 해경지방청
처 벌	**법무부 (검찰청)**	불법어업 형사 처벌	
외 교	**외교부**	불법어업관련 외교업무 총괄	

○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능동적·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협의회』**를 구성('12.2), 운영 중(분기 1회 개최)

* 참가기관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수협), 외교부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중국어선 단속업무 성격상 현안 발생 시 조속한 대응과 긴밀한 협조 등 **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필요**

⇒ 현재 실무자 차원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협의회』를 확대 개편**

□ 개선방안

○ 현행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협의회』**에 **법무부(검찰청)**를 **추가**하고 국장급 협의회로 격상하여 불법어업 관련 현안사항 논의

협업과제3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 현황

○ 해양플랜트 분야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가 서로 연계

관계기관	기관별 업무
해양수산부	망간단괴·망간각·해저열수광상 등 해양자원 개발, 조력·조류·파력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해양플랜트 개발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해양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소관 부처 이원화로 산업 전과정에 대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곤란** 및 해양안전 분야 등 **국제 규제에 선제적 대응 곤란**

* (해수부) 해양자원(해양에너지, 해저광물 등)분야 목적물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 해양플랜트를 포함하여 개발 추진(해양플랜트 전산업과정)

* (산업부) 석유·가스 등 해양자원 발굴·시추·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건조·설치·공급(건조 중심)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운송·설치·운영 등)에 국내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 건조분야와 유기적인 연계 필요

⇒ 해양플랜트 업계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을 통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 개선방안

○ 부처간 연관된 사업은 **『해양플랜트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

- 중복투자 방지 및 국제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산업부간 업무협의회 활성화 추진(필요시 부처 공동사업 추진)

* (가칭) '해양플랜트 업무협의회' 개요
  - 구성 : 해수부·산업부 공동주관, 전문기관 등 참여
  -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

* (사례) 심해공학수조 건설 : 수조동은 산업부,
  연구동 및 관련 Pre-Feed 설계는 해수부가 역할 분담 추진

협업과제4 연안침식 통합관리

□ 현황

○ 연안 침식관리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가 서로 연계

관계기관	기관별 업무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및 연안관리 법령·제도 운영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수립 관련 법령·제도 운영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침식은 **해역과 육역에서 동시 발생**하나 법령체계 및 관할 범위의 이원화로 종합적 대응이 곤란

⇒ 사전예방적 침식방지체제 구축을 위해 **관할 부처간 법령·도시계획 및 관리수단을 연계·운영 필요**

□ 개선방안

○ 국토해양부 내에서 운영했던 **『연안침식 제도개선 TF』**를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부처간 TF로 전환**하여 운영

* 연안침식 제도개선 TF 구성('12.4)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도시정책과, 전문기관(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등)

○ 해수부의 연안완충구역, 침식관리구역 도입 등과 국교부의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건축물 안전강화 등의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

* 침식관리구역 도입 :「연안관리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심사 중

* 방재지구지정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상임위 심사 중

협업과제5 마리나 산업의 전략적 육성

□ 현황

○ 마리나 관련 업무는 **해수부·국교부·산업부·문광부·관세청** 등 다수부처와 연관

관계기관	기관별 업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마리나항만 인프라 조성 및 운영, 관련산업의 육성 수상레저, 안전 관리
국토교통부	마리나관련 배후 교통시설, 산업단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요트, 보트 등 중소 조선업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요트협회 등 관리
관세청, 법무부, 농축산부	CIQ 업무 관리
소방방재청	급유, 급전 시설 등 관리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마리나 산업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산업이나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대응은 미흡**

⇒ 마리나 관련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정립 및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이 시급**

□ 개선방안

○ 마리나 관련 산업 업무를 총괄·협의하기 위해 가칭 「**마리나 육성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13.상)

* (가칭) '마리나 육성 범정부협의체' 개요
  - 구성 : 해수부·국교부·산업부·문광부 등 참여
  - 운영 :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수시 개최

○ 마리나 관련 산업 **분야별**로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범부처 정책방안 마련** 추진('13.하)

참고1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Action Plan

1.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1) 영해 및 EEZ 관리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해양영토 관할권 수호 및 해양조사강화								
▪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계획안 마련	계획 수립				
▪ 해양영토관리법 제정 추진	방침 결정	부처협의 입법예고	(계속)	국회 제출				
▪ 해양영토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착수 보고		계획 수립				
▪ 해양영토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홍보강화	해양영토 포럼창립		컨퍼런스 개최					
▪ 해양과학기지 건설				동해완료			서해완료	
▪ 정밀 해저지형조사	'13년 조사실시	(계속)	(계속)	'13년 조사완료	조사 실시	(계속)	(계속)	조사 완료
▪ 정밀 해저자원조사		기획연구 완료			조사방향 결정	정밀조사	(계속)	(계속)
▪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개발			위성개발 착수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위성개발 완료
② 도서·연안의 관리·이용 확대								
▪ 무인도서 현황도 제작 용역	용역 발주	착수 보고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지정완료			
③ EEZ 조업질서 유지 및 조업권 확보								
▪ 해경전용부두 건설				제주, 대천항 착공		울릉항 착공		

(2) 태평양·대서양·인도양 개척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해양수산자원확보를 위한 해외거점								
▪ 심해저광물 상용화 기술개발	이행계획 마련		1,000m 집광시험		기술개발, 로드맵(안) 마련	통합 채광기술 개발	기술 고도화	기술 고도화
▪ 심해저광구 탐사	이행계획 마련			광구탐사	광구탐사	광구탐사	광구탐사	광구탐사
▪ 제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T/F 출범	착수회의		계획 공고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해외어장조사 추진방안 마련	이행계획 마련	사업 착수		'13년 사업완료	계속 추진	계속 추진	계속 추진	계속 추진
▪ 해외수산개발센터 운영			운영방안 마련	예산 확보	1개소 설립	2개소 설립	1개소 설립	
▪ 국제수산협력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	설립 및 업무 수행			
② 태평양 등 대양조사 활동 확대								
▪ 해양과학 공동연구 추진				공동 연구	공동 연구	공동 연구	공동 연구	공동 연구
▪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운영				센터 운영	센터 운영	센터 운영	센터 운영	센터 운영
▪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설계	건조	인도	취항식	

(3) 남극·북극 진출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미래 극지개척 기반 확대								
▪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1차 공사 완료(3월)	활용계획 검토		2차 공사 (10월~)	완공(3월)			
▪ 북극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			연구용역 완료	플랜(안) 수립			
▪ 남극 장보고기지 자체 활주로 구축		구축계획 수립			구축사업 추진			구축완료 ('18)
② 북극항로개척 및 남북극 수산업 진출								
▪ 북극항로 개척			세부계획 마련	시범운항 (9월)	국제 공동연구	국제 공동연구	국제 공동연구	
▪ 수산업 극지 진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2. 전통해양산업과 BT·IT·ET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1) 해양생명 공학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약 및 신소재개발								
▪ 해양 신약 소재 개발 시장 진출			후보물질 약물효능 비교검증	해양천연물 신약 소재 기술이전 (1건)	차세대 해양 신약 개발 연구 추진			
▪ 해양생물 유래 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창상치료제 개발 기술이전		기능성 소재 상품화 등	산업화 기술 개발 연구 추진			
② 수산산업과 BT 융합								
▪ Blue Seed Project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		수산종자 산업육성법 초안 마련	법안 국회 제출 및 예산 확보	법률 제정		
▪ 수산 신품종개발 보급센터 설립				설립계획 수립	센터 설립 연구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센터 건립 착공	센터 완공
③ 국가 해양생명자원 정보공개								
▪ 생명정보기술개발	해양생물 유전체 뱅크 운영		밍크고래 유전체 기능 정보해석	유전체 및 발현유전체 해독(2건)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추진			
▪ 해양생명자원 정보화	통합 DB 시범운영		통합 DB 정식 서비스 개시					

(2) 해양산업과 IT 기술 융합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수중·극지 개척지원								
▪ 수중 이동통신시스템 구축					장거리 저용량통신 네트워크 기술개발			대용량 근거리통신 네트워크 기술개발
▪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착수			개념설계	상세설계	모듈제작	플랫폼제작 (시작품)
② 해운물류산업 및 수산업 첨단화								
▪ 물류·무역·통관 정보공유			관계기관 협의	추진방안 수립	시스템 설계	상세설계 및 개발	개발 및 시범운영	정상운영
▪ U-기반 첨단해운물류기술 개발		개발착수		IP-RFID 기술 이전	1세대 해상통신 모뎀 기술 이전	2세대 해상통신 모뎀 제품화	3D 컨테이너 검색장치 개발	IP-RFID 사업화/ 해상통합 모뎀시작품 개발
▪ 新자산어보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			수산자원 지도 추진

(3) 해양산업과 ET 기술 융합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개발								
▪ CO2 해저 지중저장 기술 개발	기술개발 협약체결			유망후보지 우선순위 선정	계속	저장 후보지 선정	실증사업 추진	계속
▪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준공				
▪ 해수 온도차 발전				온도차 및 냉난방 기술개발	온도차 기술개발	온도차 기술개발	실증	실증
▪ 친환경 에너지 산업(해양바이오에너지)			바이오수소생산성 향상연구	해양배양장 환경영향 평가	미세조류 디젤 국내품질 규격화			
② 친환경 항만, 친환경 어장 조성								
▪ 목포항 육상전원공급시설 시범운용				시범운용	시범운용			
▪ 제주항 육상전원공급시설 추가설치	공급시설 설치 착수	-	-	공급시설 설치완료	확대설치 계획수립			

(4) 선박 및 해양플랜트 산업 고부가가치화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첨단선박 개발 분야 선점								
▪ 친환경선박기술 시험·인증체계도 구축		인증센터 착공	예타신청	인증센터 준공	G.S 테스트 베드 구축	SCR 인증	De-PM 성능평가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개발	형약서 체결	법 개정안 마련		법 개정				평형수 기술개발
② 해양플랜트 기술력 향상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		방안 마련		설계	설계 구축	준공		

3.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1) 양식산업 육성 및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기술집약형 생태보존형 양식기술								
▪ 빌딩양식시스템		에비타당성 용역 계약 추진			예산확보	시범사업 실시		
▪ 복합형 생산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본 사업 실시	
② 양식어업분야 진입장벽 완화								
▪ (가칭)양식산업육성법 제정				제정안 마련	국회제출			
▪ 어업허가 상한톤수 조정		조정방안 마련		수산업법 개정(안) 마련	수산업법 개정	어선안전 설비기준 개정		
③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 연안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선정	관리위원회 개최	조성 추진 (4개소)	조성추진	조성추진	조성추진	조성추진
▪ 바다숲 조성			바다숲 조성사업 중간평가	조성 추진 (4개소)	조성추진	조성추진	조성추진	조성추진

(2) 수산 유통산업 혁신 및 가공산업 지원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수협을 근간으로 생산자 중심의 신유통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 공모		3개소	3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및 발표			비축 추진 2%	비축 확대 3%	비축 확대 5%		
▪ 수협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기본계획 수립	예타조사			1개소
② 유통활성화 위한 전자상거래								
▪ 수협 B2B·B2C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예산 확보		사업실시	사업실시	사업실시	
③ 수산가공 산업 지원확충, 품질인증								
▪ 지역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확충		평가단 구성	평가단 운영	사업평가, 모니터링	거점단지 신규 조성 (연 2개소)			
▪ 품질인증제 개편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	연구용역	개편방안 마련			
▪ 유기수산물인증제 도입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4. 지구촌 해운물류시장 개척

(1) 해운산업 신산업동력 육성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해운·물류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해운보증기금 신설 추진	용역 완료		근거법안 마련	국회제출 (12월)				
▪ 선박펀드 투자 활성화			법률 개정안 마련	대선(貸船) 의무기간 단축	펀드운영사 겸업금지 완화			
▪ 항만하역업 등록기준 강화			등록기준 (안) 마련	법률 개정안 마련	법률 개정·시행			
▪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13년 사업자 선정	'13년 사업시행		'13년 사업종료 (12월)	'14년 사업시행	'15년 사업시행	'16년 사업시행	'17년 사업시행
②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								
▪ 정부간 해운회담 개최		개최계획 마련						
▪ 한-미얀마 해운항만협력 MOU체결	MOU 체결							
▪ 해운항만분야 수주지원단 파견				지원단파견				
▪ 항만물류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설명회개최				
▪ 협력대상국 기본계획수립 및 F/S지원				타당성조사				
▪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추진			평택항 배후단지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 글로벌 항만마케팅센터 구축		센터구축	센터운영	마케팅 추진	마케팅 추진	마케팅 추진		
▪ 부산항 환적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전략마련				

(2) 항만별 특화 개발 추진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 해양경제특구도입		워킹그룹 구성		법률초안 마련				
▪ 울산오일허브 사업 착수(1단계 4선석)			기본계획 변경	사업착수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준공	
▪ 광역투기장 조성계획 마련	전략환경 영향평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 부산항·울산항 개발	(부산항) 배후단지 공급	(부산항) 증심준설 공사추진	(부산항) 증심준설 공사추진	(울산항) 오일허브 2단계 외곽시설 착공				
▪ 광양·인천항 개발	공사추진	공사추진	공사추진	공사추진	인천 국제부두 개장			

5.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 조성

(1)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육성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거점형 국제마리나 조성			설계발주		설계완료	거점 마리나조성		마리나 조성 완료
▪ 부산,인천,제주 등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제주,인천 공사착공	제주완공	부산 완공		인천완공
▪ 해양레포츠 체험교육	계획 수립	시행	시행	결과 보고 (12월)	'14년 시행	'15년 시행	'16년 시행	'17년 시행
▪ 마리나 정보시스템 구축			구축 완료					
▪ 국적 크루즈 육성법률 제정			실태조사 진행	특별법안 연구 착수	국회제출 (10월)			
▪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	수정계획 마련			실시설계 및 공사착수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② 4계절 중단 없는 해양수산 관광인프라								
▪ 우수해수욕장 선정			평가계획 수립	평가 및 선정 (9월)				
▪ 해중공원 조성(시범사업)				실시설계 (6~12월)	사업 착공	사업 시행	사업 준공	
▪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선정	관리위원회 개최	조성 추진 (4개소)	조성추진	조성추진	조성추진	조성추진
▪ 내수면 생태목장 조성				적지조사 실시	목장조성	목장조성	목장조성	목장조성
▪ 해중레저 거점마을 선정				추진계획 수립	거점마을 선정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③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인프라								
▪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준공	개관('14.3)			
▪ 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추진		예산반영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실시	착공	건립 추진	건립 추진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추진				실시설계 및 착수	건립 추진	준공		

(2) 연안·어촌의 국민 생활 공간화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시민친화적 해양공간 조성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착수		사업계획 변경	친수공원 국제공모	부지조성 완료	민간사업 착수		
▪ 기타항만 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영종도)	타당성 검토 (고현) 제3자공모 (인천)	사업착수 (영종도) (고현)			
▪ 국가미항 프로젝트		부산 타당성검토 시행계획 마련		인천미항 기본구상 착수	부산타당성 검토 및 인천기본 구상 완료	부산미항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 도서교통 이용촉진 법률 제정	연구용역 발주		전문가 간담회	법률안 마련	법률 제개정	시행	시행	시행
▪ 국가고속해상교통망 구축		실태조사	전문가 세미나	구축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시범 사업	사업 착수	계속
▪ 해상교통인프라 개선	실태조사			투자계획 수립	예산 반영	시행	시행	시행
② 어촌마을 특화개발 및 어항 고도화								
▪ 어촌산업마을				육성계획 수립	10개소 육성	10개소 육성	10개소 육성	10개소 육성
▪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마련						
▪ 어촌체험마을조성				7개소 조성	10개소 조성·보수	10개소 조성·보수	10개소 조성·보수	10개소 조성·보수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법률 개정안 마련	법률 개정			
▪ 어촌관광 활성화 워크숍			워크숍 개최					

6.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구현

(1) 해양환경 관리 선진화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만들기								
▪ 인프라 구축 및 오염총량제 확대	방침마련 이행평가			시행계획 서행 조사선 구축	동해 조사선 구축			
▪ 정화복원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13 정화 사업착수	'14 정화 사업 대상 선정/ 보호구역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지정 (3개소)	지정 확대 (연 1~2개소)			
② 연안주민을 지키는 선진해양공간관리								
▪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 도입				법률 개정	관리구역 지정·운영	계속	계속	계속
▪ 국가 연안정비사업 시행	설계용역 발주준비	설계용역 발주방침	설계용역 발주요청	설계용역계 약착수	계획수립 사업집행	계획수립 사업집행	계획수립 사업집행	계획수립 사업집행
▪ 연안완충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시범구역 지정	완충구역 지정·운영	계속	계속	계속

(2)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범정부 해사안전종합대책								
▪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대책수립	시행						
▪ 해사안전종합관리 TF 구성	TF 구성		특별점검					
② 인적사고예방, 해적피해방지								
▪ (가칭) 해사안전 운동본부 구성	본부구성		해사안전 캠페인					
▪ 소말리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 해상모의훈련	현장훈련 실시			현장훈련 실시				
▪ 선원대피처 설치의무화 관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제처 심사		공포				
③해양안전 종합정보 실시간 제공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사업 발주			준공				
④첨단 해양교통시설 확충 및 장비 국산화								
▪ 첨단 대체항법시스템 구축	설계서 검토	발주요청	부지매입 협의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완료	시험 서비스	시험 서비스
▪ 울산·제주 관제센터 신축	울산센터 완공			제주센터 완공				
▪ 관제장비 국산화·기술개발	3차사업 평가	4차사업 발주					국산화 개발완료	시범운영
⑤선박 사고방지								
▪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계속)						
▪ 유럽 및 아·태 지역 우수등급 유지	취약선 중점관리	(계속)	(계속)	우수등급 유지	우수등급 유지	우수등급 유지	우수등급 유지	우수등급 유지
▪ 주변국과의 해사안전협력강화			한·중회의 개최	한·일, 한·호 회의	양자협력 체계 유지	양자협력 체계 유지	양자협력 체계 유지	양자협력 체계 유지
⑥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조성								
▪ 침수피해 방지대책				마산항 착공	목포항 타당성조사 완료			
⑦어촌 안전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 취약 어항시설 연차적 보강	보수보강 계획수립			보강추진	보강추진	보강추진	보강추진	보강추진
▪ 국가어항 개발·정비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⑧(가칭)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안 마련	국회제출				

7. 맞춤형 복지형 일자리 창출

(1) 양질의 일자리 확충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마리나 관련 일자리 창출								
▪ 마리나서비스업 운영근거 마련				마리나법 개정추진	하위법령 마련			
▪ 마리나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실태분석				
▪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방안 마련				
②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육성								
▪ 양식산업(10대 품목) 육성			10대품목 육성 중간 점검	'13년 최종 평가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산업화 완료
▪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착수			관련법령 마련	Aqua-Pet 산업단지 조성계획 마련			
▪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낚시산업 발전 T/F 구성 및 운영		낚시진흥 기본계획 수립	낚시 인프라 구축 지원			
③ 해운 항만 관련 신규 일자리								
▪ 선박관리산업 육성		마케팅 전략수립	일본 설명회	기본계획 수립				
▪ 2종 배후단지 시범지정		법안 의견수렴	입법 예고	국회제출	하위법령	사업공모		

(2)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실천 과제	100일 계획 4월	5월	6월	13하	14	15	16	17
① 선원 어업인 육성								
▪ 해사고, 해양수산연수원 역량 강화	실태 분석	방안 마련		역량강화 추진				
▪ 수산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추진협의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② 전문 해양인력 양성								
▪ 해양플랜트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확대				
▪ 해양대 정원 증원	추진위 구성	관계부처 협의		기본계획 확정				
③ 청장년 재취업 및 장년 노년층 귀어지원								
▪ 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발전 방안마련	역량강화 추진				
▪ 신규 수산업경영인 800명 선정·육성	선정완료	자금신청	기술지원		계획수립(1월) 사업자 선정(2월)			
▪ 어촌정착 유도	선정완료	자금신청	기술지원		계획수립(1월) 사업자 선정(2월)			

(3)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복지대책

실천 과제	100일 계획			13하	14	15	16	17
	4월	5월	6월					
① 어촌 및 어민복지 증진								
▪ 어촌지역 의료 서비스망	실태 조사	실태 분석		대책 마련				
▪ 해양사고 유자녀 복지	실태 조사	실태 분석		대책 마련				
▪ 어민 재해복구 지원 현실화				DB구축 (8월)				
▪ 조건불리 직불제	시행계획	설명회		직불금 지급				
▪ 고령양식어가 어장연금제				도형모형 검토	선정기준 마련		시범사업	본사업
▪ 면허어장 휴식 직불제				제도정비	시범사업	본사업		
② 도서민, 선원 생활복지 향상								
▪ 선원퇴직자 공제제도 도입		연구용역 실시		도입방안 마련(10월)	법률제정		운영	
▪ 선원복지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 연안항 경관기본계획			시범항만 선정 (4개소)	기본계획 마련				
▪ 항만 친수·문화공간 조성	친수공간 공사 (2개소)	공사추진	공사추진	공사추진	공사완료			

참고2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 관련 입법계획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비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 해양시설 신고수리 등 업무 권한 지방 이양 ○ 해양오염방제분담금 강제징수 근거 등 마련	○ 법제처제출 : 7월 10일 ○ 국회제출 : 9월 1일 ○ 시행 : '14년 1월 1일	법령정비 (기타법령 정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권한 지방이양 결정사항 반영 ○ 체납가산산금 제도 및 부담부과기준 합리화 ○ 해양생태계조사, 국가 및 시도지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규정	○ 법제처제출 : 6월 30일 ○ 국회제출 : 8월 31일 ○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령정비 (기타법령 정비)
습지보전법 (일부)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권한 지방이양 결정사항 반영	○ 법제처제출 : 6월 30일 ○ 국회제출 : 8월 31일 ○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령정비 (기타법령 정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생산자단체에 포함 ○ 종자류, 잠사류, 포획 등 용어 순화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규정 신설	○ 법제처 제출: 5월 30일 ○ 국회 제출 : 7월 30일 ○ 시행 : 공포일	
내수면어업법 (일부)	○ 어업면허 및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명확화	○ 법제처 제출: 6월 30일 ○ 국회 제출 : 8월 31일 ○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 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식재료 안전확보 등 지원 ○ 학교급식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6월 30일 ○ 국회 제출 : 8월 31일 ○ 시행 : 공포 후 6개월	
농어촌 다원적 자원보전관리법 (제정)	○ 농어촌 자연자원(흙자원, 물자원,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이용원칙 명시 ○ 농어촌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다원적자원 보전기금 조성 등	○ 법제처 제출: 6월 30일 ○ 국회 제출 : 9월 30일 ○ 시행 : 공포 후 1년	

수산업법 (일부)	○ 면허어업 우선순위 정비 ○ 양식어장 심사·평가제 도입 ○ 면허의 유효기간 및 연장 어가기간 단축 ○ 면허수면 범위의 축소 ○ 외해양식어업 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	○ 법제처 제출: 7월 31일 ○ 국회 제출 : 9월 30일 ○ 시행 : 공포 후 6개월	
어촌·어항법 (일부)	○ 어항시설의 과학적인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증진 근거 마련 ○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 제도개선 등 어항 관리·운영 선진화 방안 근거 마련 ○ 어항개발사업 시행 시 해양외력(파력, 조력 등) 및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어항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 수용 시 보상근거를 마련	○ 법제처 제출: 7월 31일 ○ 국회 제출 : 9월 30일 ○ 시행 : 공포 후 6개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농어업경영체 등록제 개편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정책 명확화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확대·개편(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마련, 시스템 관리업무 농정원 위임 근거 마련 등)	○ 법제처 제출: 8월 31일 ○ 국회 제출 : 10월 30일 ○ 시행 : 공포 후 6개월	
농어업인 재해보장법안 (제정)	○ 농어업인 재해보장사업에 대한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작업 중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을 통해 보호	○ 법제처 제출: 7월 31일 ○ 국회 제출 : 10월 31일 ○ 시행 : 공포 후 1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독립 법인화(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이사회 정수 축소, 사업전담대표 임기 단축 ○ 경제사업의 평가체제 구축	○ 법제처 제출: 8월 31일 ○ 국회 제출 : 10월 31일 ○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5년마다 관상어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 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 ○관상어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품종육성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	○법제처 제출: 8월 31일 ○국회 제출 : 11월 30일 ○시행 : 공포 후 1년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일부)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위임근거를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 체계를 개선	○법제처 제출: 9월 30일 ○국회 제출 : 11월 30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어선원(제3국적 어선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선사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9월 30일 ○국회 제출 : 11월 30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전부)	○부두운영회사제도 운영 및 성과평가제도 근거 마련 ○항만연수원 지원근거 마련 등 ○'컨'하역요금 신고제 개편 및 실태조사 근거마련 등	○법제처제출 : 11월 20일 ○국회제출 : 12월 30일 ○시행 : '14년 7월 1일	
선박투자회사법 (일부)	○선박운용회사 겸업금지 완화 ○일부 조항 조문 정비	○법제처제출 : 10월 10일 ○국회제출 : 12월 1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도개선
선박직원법 (일부)	○전자기관사의 자격증명 요건 신설 ○해기사 면허 갱신 가능요건 추가 ○시운전 선박을 적용범위에 포함	○법제처제출 : 3월 1일 ○국회제출 : 7월 1일 ○시행 : '14년 10월 30일	제도개선

선원법 (일부)	○STCW 협약에서 새로이 규정한 전자기관부원 등 선원의 자격제도를 법률에 규정 ○선원업무처리지침·외국인 선원관리지침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한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고,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을 개정	○법제처제출 : 6월 1일 ○국회제출 : 9월 1일 ○시행 : '15년 1월 1일	법령정비 (기타법령 정비) 제도개선
항만법 (일부)	○민간개발 촉진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7월 1일 ○국회제출 : 9월 1일 ○시 행 : 공포후 6개월	법령정비 (헌법 합치성 관련 정비 및 기타 법령 정비)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	○선수금 수령 및 토지상환채권발행 승인 처리기간 명시 ○자동승인 조항 신설	○법제처제출 : 7월 31일 ○국회제출 : 9월 30일 ○시행 : 공포후 3개월	제도개선
해사안전법 (일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 사업자 정보를 선박안전도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법제처제출 : 5월 15일 ○국회제출 : 6월 30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도개선
선박법 (일부)	○국기 게양 및 선박국적증서 비치 의무 면제 명확화 ○선박법관련 허가, 인가, 등록 등 수수료 산정투명화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선박 등록대상에서 제외	○법제처제출 : 6월 1일 ○국회제출 : 7월 20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령정비 (헌법 합치성 관련 정비 등)
선박안전법 (일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인증 및 고시절차 마련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1일 ○국회제출 : 7월 20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도개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일부)	○심판관 전보규정을 재임용 규정으로 변경 ○특별조사부를 비상설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화 ○심판변론인 협회 설립기준을	○법제처제출 : 5월 22일 ○국회제출 : 7월 15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도개선

	허가에서 인가로 변경 ○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증거 보점 범위 확대, 강화 ○ 해양안전심판에서의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신설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5년마다 국가어선 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 ○ 특정해역의 어로보호 사무처리를 위한 어로보호본부 설치·운영 ○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안전조끼 의무착용 근거 마련	○ 법제처제출 : 7월 31일 ○ 국회제출 : 11월 30일 ○ 시행 : 공포 후 1년	